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정책과 추진 계획



정 봉 근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장
bchung1@moe.go.kr

1.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기반사회,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2월 새로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건설”의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설정한 바, 이 같은 국정목표와 원리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모든 힘의 중심에 국민이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참여 민주주의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이것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 고도화된 개인의 역량과 지식, 2)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3) 대외적 신뢰는 정부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근본적인 관점과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정 목표 및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비전과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정책 비전과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 협력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등 주요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과 과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 국민의 인적자원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교육인적자원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기본 방향을 크게 1)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2)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3)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으로 잡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외부 컨설팅을

통한 교육인적자원부 혁신”, “분권·자율·참여를 통한 현장 지원 체제 구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3대 기본 방향 중 본고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1)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연구 역량 확충

첫째,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의 대학원 및 연구소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을 성과 위주로 확대 발전시키고, 국가전략분야 등 이공계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보호 육성한다. 또한 첨단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연구인력 배치 등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학부과정에서 폭넓은 기초학문 습득 후 의학, 법학, 경영학 등 전문분야에 입문하도록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교육·연구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의 우수 교수를 초빙하는 한편, 외국학생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Off-line 방식과 On-line 방식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다.

넷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학문분야별 평가를 위해 민간 평가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전담할 상설 평가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구에 의한 대학 자체의 경영진단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투자를 확대한다.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마련되는 재원은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2) 지역발전의 중심체로서 지방대학 육성

첫째, 지방대학 특성화 프로젝트(가칭 “지역 BK 21”사업)를 통한 지방대학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지방대학을 지역 R&D 및 산-학-연-관 협력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간, 대학과 산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도록 하되,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Bottom-Up 방식 및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일괄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대학간, 대학-산업체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축한다. 지역내 대학간 학점 상호인정 등 학사 및 교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학과를 개설하는 한편, 교육과정 외부평가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다. 또한, 연구전담인력 확보 및 교수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실적을 인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산학협력회계, 학교기업 등 산학협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방대학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내에 지방대학발전기획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중심으로 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추진체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지방대학 육성 추진 전담기구로 운영하도록 한다.

나.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

첫째, 참여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과 연계하여 지방대 육성, 과학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관련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 부처의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인적자원 영향평가, 사업 투자 분석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작년 12월에 발표한「국가인력수급 전망과 과제」에 근거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총괄 추진할 것이며, IT, B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및 금융·법률·경영 등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이 집중 육성되도록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특히 올해 194억원이 투입되는 이공계 우수 대학생 무상 국가장학금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중시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RD)체제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현재 부산, 광주, 충북의 3개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 대학, 교육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며, 자원의 배분을 추진토록 유도한다.

넷째, 인적자원 공급과 수요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하려 한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인력수급 정보망을 개발하고, 자격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기술대학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섯째, 영유아 교육·보육을 확대하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는 등 2001년 현재 58.6%에 머무르고 있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 81.1%)으로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성인학습과정 설치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과정 설치를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정책의 성과를 누구나 쉽게 계량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준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주요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 계획

이하에서 지식기반사회, 지방 분권화,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교

육인적자원 정책과제라 할 수 있는 산학 협력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한다.

가. 대학중심의 산학 협력 체제 구축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학에는 1) 지구적 차원의 시대변화를 읽으면서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인문·사회과학적 통찰력, 2) 경영관리부문의 전문이론, 3)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발전에 지역대학들이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사회나 정부는 대학의 이같은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수많은 산학협력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대학이 산학협력의 중심적 위치에 서지 못해 왔으며, 교육과 학술연구 중심의 교육법제로 인하여 대학에서 산학협력은 주변적인 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지금까지의 산학협력은 실질적 성과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 형성에만 주력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성과를 지향하는 산학협력,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산학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여러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간접경비의 현실화,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활동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는 바, 올해 9월부터 대학은 다음과 같은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첫째, 대학의 산학협력사무를 전담·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게 된다.

둘째,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하여, 산업체가 교육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위를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된다.

넷째, 대학 안에 기업이나 정부가 자기소유의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된다.

다섯째, 대학이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산학협력단체, 지자체 등과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교수의 산학협력 참여 실적이 교수 업적평가 등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교육재정 GDP 6% 확보로 추가 조성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지방대학 육성에 집중 지원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인력 양성과 지역의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시설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일괄 지원

하며,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 전공분야나 영역별로 연구중심 / 교육 중심 / 직업기술교육중심 등으로, 대학원 중심 / 학부 중심 등으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RRC 등),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이 대학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고, 이공계 우수대학생 국가장학금 사업 추진시 장학금 예산의 50% 정도를 매년 지방대학 진학생에게 할당(03년 97억원)하며, 장학금 지급에서도 등록금 외에 매월 10~2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연수, 해외공동연구, 박사 후 과정, 해외유학 지원 등에서도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4. 맺음말

최근의 OECD 선진 각국의 정책 동향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정책 최우선 과제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범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인적자원정책 시각에서 기존 교육정책

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종합성·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개혁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기본적 정책 프레임으로 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조정·총괄로 정책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목표와 비전, 추진과제를 가시화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달성할 변화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재관 편집위원장 jkwankim@plaza.snu.ac.kr